

2025학년도 2학기 학력진단평가 1학년 민법 [OX형] 답안

시험일시 : 2025.09. 05.(금) 11:40 ~ 13:00

출제교수 : 김덕중 교수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	○	제11회 변시. 문 26.	
2	X	제13회 변시. 문 1.	
3	○	제11회 변시. 문 12.	
4	X	제11회 변시. 문 2.	
5	X	제10회 변시. 문 1.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원래 <u>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고,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침.</u>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u>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u> 할지라도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름.
6	X	제11회 변시. 문 12.	
7	X	제13회 변시. 문 1.	
8	X	제12회 변시. 문 9.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u>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음.</u>
9	X	제12회 변시. 문 11.	
10	○	22년 제2차 변모. 문 3.	
11	○	제13회 변시. 문 5.	
12	X	제13회 변시. 문 9.	
13	X	제13회 변시. 문 1.	
14	○	제14회 변시. 문 1.	
15	○	제14회 변시. 문 2.	<u>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u>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6	X	제14회 변시. 문 5.	
17	X	제14회 변시. 문 7.	
18	○	24년 제1차 변모. 문 5.	
19	X	제11회 변시. 문 2.	
20	○	24년 제1차 변모. 문 35.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음.
21	X	제13회 변시. 문 30.	
22	○	제13회 변시. 문 19.	
23	X	제13회 변시. 문 19.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결국 甲은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전부채권자 丁에게 대항할 수 있음.
24	○	제13회 변시. 문 22.	
25	○	제13회 변시. 문 25.	
26	X	제13회 변시. 문 25.	B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행해지는 경우, 압류명령은 유효하나 전부명령까지 유효하게 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전부명령은 무효임. 다만, B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이에 대한 유효한 압류명령은 추심자체만 금지할 뿐, B채권 청구 자체는 가능하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존재하는 것임. 결국 채권자대위소송은 인용됨.
27	○	제11회 변시. 문 23.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수익자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 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됨
28	○	제12회 변시. 문 18.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음
29	X	제12회 변시. 문 3.	
30	X	22년 제2차 변모. 문 20.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31	○	제11회 변시. 문 27.	
32	○	22년 제2차 변모. 문 31.	
33	X	22년 제2차 변모. 문 31.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u>외측설의 태도(판례)에 의하면 을의 단독부담부분인 4,000만 원만큼 먼저 소멸하고, 다음으로 공동부담부분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소멸하므로, 丙의 부담부분은 5,000만 원임</u>
34	○	23년 제2차 변모. 문 8.	
35	○	23년 제3차 변모. 문 6.	
36	○	제11회 변시. 문 29.	
37	X	22년 제3차 변모. 문 30.	<u>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이 있는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연대채무에서 상계는 절대효 사유(제418조 제1항)이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상계는 판례상 절대효 사유임</u>
38	X	제12회 변시. 문 14.	
39	X	22년 제1차 변모. 문 22.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u>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여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음.</u> 그렇지 않고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음.
40	X	제10회 변시. 문 24.	
41	X	제10회 변시. 문 22.	
42	○	24년 제2차 변모. 문 6.	<u>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u>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u>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u>
43	○	24년 제3차 변모. 문 35.	
44	○	24년 제2차 변모. 문 6.	
45	○	24년 제3차 변모. 문 20.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46	○	24년 제3차 변모. 문 22.	
47	X	24년 제3차 변모. 문 22.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 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48	○	24년 제2차 변모. 문 5.	
49	X	제14회 변시. 문 29.	
50	X	제14회 변시. 문 11.	
51	○	제14회 변시. 문 13.	
52	X	제14회 변시. 문 19.	
53	X	제14회 변시. 문 2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
54	X	제14회 변시. 문 22.	
55	X	제14회 변시. 문 26.	
56	X	제13회 변시. 문 10.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음.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57	X	제13회 변시. 문 11.	
58	X	제12회 변시. 문 3.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및 계약의 구속력을 감안하여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안의 경우 약정 계약금인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음
59	X	23년 제1차 변모. 문 26.	매도인이 약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 및 매도인으로 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음
60	○	23년 제1차 변모. 문 26.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61	X	23년 제3차 변모. 문 28.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의 임차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의 방법으로 <u>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u>
62	○	23년 제3차 변모. 문 28.	
63	X	22년 제2차 변모. 문 29.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 <u>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u> ’ 을 요건으로 하는데,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음.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유익비상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음
64	○	제11회 변시. 문 1.	
65	X	제10회 변시. 문 32.	
66	X	제10회 변시. 문 19.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丙)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u>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u>
67	X	제10회 변시. 문 29.	
68	○	제11회 변시. 문 8.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u>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이 중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u>
69	X	제11회 변시. 문 19.	
70	○	22년 제1차 변모. 문16.	
71	○	제12회 변시. 문 8.	
72	○	제13회 변시. 문 21.	
73	○	24년 제2차 변모. 문 19.	
74	○	제14회 변시. 문 25.	
75	○	제14회 변시. 문 27.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76	X	제14회 변시. 문 28.	
77	○	제14회 변시. 문 28.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함.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당초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처럼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면, 그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78	○	24년 제3차 변모. 문 6.	
79	○	24년 제3차 변모. 문 7.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부정함. 또한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乙)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임. 결국 병은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음
80	○	24년 제3차 변모. 문 4.	